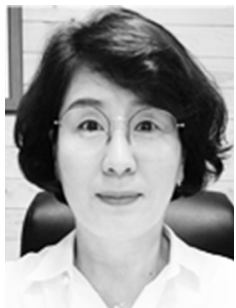


특별기고



오득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봄에 심은 나무뿐 아니라 울창한 숲에서 자라는 큰 나무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광주 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광주지역 5월 한 달간 평균 강수량은 1.9mm로, 예년 평균인 113.9mm에 1.6%에 그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저 강수량으로 우리 지역 전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뭄 장기화에 고사 빈번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농작물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심어놓은 정원식물과 조경수, 그리고 식재된 나무들까지 말라 죽는 위기에 이르고 있다.

나무가 잘 생육하기 위해서는 식물별로 알맞은 빛과 수분(물), 온도, 공기, 그리고 영양분이 고루 함유된 토양조건이 필요하다. 이를 식물 생육의 5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수분(물)이다. 물은 생명에 필요한 대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일시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잎이 마르는 증세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위조현상으로 결국 말라 죽는 고사에

이르게 된다.

나무들은 보통 지표면 20~30cm에서 자라는 작은 뿌리를 통해 수분과 토양 속의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렇게 흡수한 물과 양분은 잎까지 도달하는데 짧게는 2~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 심각한 가뭄이 장기화되면, 수일 내에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장기화된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수목 생육환경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반복되는 봄철 건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를 심은 후 차광막을 씌워서 멀칭 처리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바크(파쇄목 등)를 덮어 주변 중량감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갈(해미석, 굽은 마사)이나 비닐 같은 것을 토양 표면에 덮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요즘같이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대기 온도보다 지면의 온도가 약 10℃ 이상 높아져 오히려, 잔뿌리 손상과 건조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비닐 멀칭은 일시적으로 토양에서 증발하는 물을 잡아주어 가뭄 해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습 고온으로 잔뿌리 손상을 유발하게 되므로 지양해야 한다.

수도시설이 없는 경우 나무에 물주머니를 설치해 건조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물주머니에 물을 담아 걸어두고 물 나오는 양을 조절하면 일주일 이상 물관리를 할 수 있다.

여름철은 햇빛이 강하고 습도가 높아져 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이다. 그러나 태

풍이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기습적으로 내리기도 하므로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해 주어야 한다.

먼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는 토양이 급방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해주어야 한다. 사람도 여름철에 물을 더 많이 마시듯이 나무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비가 오거나 일기예보 상 2~3일 이내에 비가 올 경우에는 물주기를 피해야 한다. 토양이 과습한 경우에는 뿌리가 썩고 병해충이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낮에 뜨거울 때 물주기를 하면 열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해 질 무렵 수목의 온도가 내려갈 때 물을 줘야 피해가 없다.

물관리·가지치기 핵심

또한,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국지적인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를 대비해 적절한 양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가지치기는 건강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으로 수형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분을 감소시켜주며, 공기 순환이 잘되도록 하여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는 현상도 예방해 준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부지방은 6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가 끝나면 가을까지 수차례 태풍이나 기습호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서 건강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올바른 수목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함께 이겨내는 가뭄

죽이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을 맞으면서 공연을 즐기는 콘셉트의 가수 사이의 ‘함께쇼’는 한 회당 300톤의 식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축제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물을 안 뿌려도 충분히 신나는 공연일 텐데, 가뭄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해야 하나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식수용과 농업용수는 다른데 이번 콘서트 보고 물 낭비라고 하는 지적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뭄에 대한 시선은 가뭄의 피해 당사자인 농민과 가뭄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인식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뭄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17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이었다. 이는 사막화 방지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고 전 세계적인 동참을 호소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다. 올해는

‘함께 이겨내는 가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가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최근 우리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분당 100만개의 페트병을 소비하고 있다. 2분 만에 마시고 쉽게 버려지는 생수병은 쉽게 땅에서 분해 되지 않아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미세플라스틱은 우리의 먹거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팩에 든 음료를 먹거나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함께 이겨내는 가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 운전자·보행자 주의를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서행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나게 되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

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벌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절대적으로 보행자, 운전자 안전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진병진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남 의대 설립 더 미뤄선 안 된다

전남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언제가 설립 될까.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 2년 전 논의를 진행하던 의정협의회는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논의는 스톱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민들은 아파도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것인지 원망의 소리가 크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다.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료 인력을 양성할 의대가 없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수는 모두 40개교로 서울 8개, 강원·대구 각 4개, 경기·대전·부산 각 3개, 인천·충남·충북·경남·광주·전북 각 2개, 울산·경북·제주 각 1개 등이다.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는 뇌혈관과 소아

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코로나 등을 대응할 감염내과 전문의는 단 2명이라고 한다. 의사 수도 전국의 3.0%인 4,740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 637명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로 채워져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고 의사수도 절대 부족해 연간 80만 명이 의료서비스를 위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유출 비용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새 정부가 진정 호남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전남에 당장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이런 의료소외가 또 어디 있나. 의대 설립은 의료 수요를 위한다는 1차적 목적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의대가 설립되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인재가 모여들고, 그러면 해당지역은 발전을 꾀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다. 의대가 없는 전남에 고령화 위기, 지역소멸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새 정부는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기 바란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금 지급해야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포함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소병철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4조 제2항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도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의미를 더했다.

현행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춰 볼 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해 유족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별법은 제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비해 20년 이상이나 제정이 늦었다. 제4·3법이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데 비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올해 비로소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및 접수 시작하면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미 유족 1세대는 80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보상을 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개정안은 제4·3사건의 특별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유족’에 대해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법례를 참고했다. 이는 곧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정 법률의 안정성까지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께 합당한 보상이 있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지난 74년 동안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버텨온 유족들께 늦었지만 지급이라도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공조형물 문화적 의미 되찾길

기지사첩



민찬기

사회부 기자

실상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공공조형물 점검은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1년에 1~2회 실시하고 있지만, 특이사항 확인 등 형식적인 점검 뿐이다. 여기에 일부 공공조형물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당수의 조형물들이 전문가와 주민들의 소통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과 해야 하지만 현재 설치된 공공조형물들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역할론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조형물은 건물의 입간판에 뒤섞여 존재감을 잃고, 길거리에 갑자기 나타난 조형물은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만 될 뿐이다.

지역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형물은 주민들에게 눈엣가시다. 이미 혈세를 쏟아붓은 공공조형물을 다시 철거하는 것도 문제다.

이젠 도시에 덩치 큰 무언가를 얹힐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화적 매개로 전환해야 한다. 미술을 통한 상상력의 확장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전문가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문화적 의미를 되살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조형물이 도시에 덩치 큰 애플단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작품이 되길 기대한다.